



한우안테나 NEWS

◎ 한우 둔갑판매 첫 '실형'

가짜한우를 팔다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하였다.

지난 3월 28일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판매를 하다 적발된 서울 송파구 원모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둔갑판매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사법부가 큰일을 해냈다”며 이번 판결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유통투명화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반겼다.

[축산신문 2005년 4월 1일자]

◎ “농업진흥지에도 축사시설 허용을”

축산인들이 농지에 축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을 추구하고 나섰다.

현행 농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면적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젓소, 한우)를 사육하려면 약3천평이하, 양돈, 양계의 경우 약9천평 이하까지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일정면적 이상의 규모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축산업 진입 규제로 인해 농지내 축사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등 추가 비용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에서 축사는 농업용시설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농지에 축사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질병도 막고, 가축분뇨도 자원화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친환경축산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2005년 4월4일자]

◎ 정부 부루세라 살처분정책 지속 유지

농림부 관계자는 “소부루세라 발생을 줄이는 것은 농가의 협조와 관리에 달려있으므로 정부와 농가가 함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또한 “백신접종은 청정지역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아직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농가는 소부루세라의 피해자이지만 발생의 책임에 농가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농가들이 소 구입시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입해야 하고, 가축 이동 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접종은 장기간에 걸쳐 접종해야 하고, 북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축산신문 2005년 4월 22일자]

◎ 축산현안 해결 위한 국회의원 면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제253회 임시국회 상임 위 일정에 앞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농지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렬 대한양돈협회장, 남호경 축단체회장(전국 한우협회장), 이정백 전국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상주축협장), 정찬길 건국대교수(학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 친환경 의지 축산업등록 '탄력'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말 기준 27.0%의 등록률 보이던 축산업등록제가 2005년 4월 20일 현재 등록대상농가 3만9천87호중 2만2천5백52농가가 등록을 마쳐 57.7%를 기록했다.

이중 한육우의 경우는 등록대상 1만4천5백43농가중 1만1천8백12농가가 등록, 81.2%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낙농은 등록대상 8천5백45농가중 31.2%, 양돈 등록대상 9천4백48농가중 44.8%, 양계 등록대상 5천3백23농가중 57.2%의 등록을 기록 중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는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안전성 관리 등 축산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진축산으로 가는 첫 걸음인 만큼 반드시 등록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도시화에 밀려 축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2005년 4월 28일자]

◎ 6월부터 소 부루세라병 방역강화

폭증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강화를 위해 6월부터 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또 신속한 검사를 위해 다음달까지 채혈요원 30명이 추가 투입되고 방역본부 출장소 관내 사육규모별로 재배치 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조옥현 사무관은 “소 수집·중개상이 관리하는 소의 부루세라병 방역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오는 6월부터 분기별 1회이상 소상인들이 사육하는 소에 대해 정기 검사 및 반기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소 수집상·중개상은 1394명에 이르는 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5만1000마리에 이른다.

연도별 한우 부루세라병 발생건수는 2003년 62건, 590마리, 2004년 595건, 4101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 지난 3월에 이미 예년 수준인 631건에 4024마리가 발생했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 5월 6일자]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인상

소·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해 오던 포상금이 5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번 포상기준 개정을 보면 밀도살 신고 또는 검거자에 포상금 50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미신고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 행위를 신고할 경우 5만~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신고시 해당 식육 소비자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했다.

[농민신문 2005년 5월 25일자]

◎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또 줄이나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고급육 생산농가에 지급해오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내년에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한우 농가들의 반발과 거세 기피 현상 등 고급화에 역행하는 심리가 대두 될 것이 우려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장려금이 일부 지역에서 서류를 변조, 특정 농가에게 과다 지급되거나 농가가 아닌 상인들이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었다.

이같은 사유로 감사원은 농림부에 본래 취지에 부합한지 질의를 해왔으며, 농림부 담당자는 본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개선할 부분에 대한 답변의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다.

[농민신문 2005년 5월 25일자]

◎ 강원도 홍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국내 최초의 브랜드 경매인을 실시했던 홍천 늘푸름한우가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으로 다시한번 주목 받고있다.

홍천축협(조합장 홍병천), 한경대학교(총장 최일신), 홍천군(군수 노승철),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6월 28일 '홍천 늘푸름한우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에 시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에 생산이력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작업 실시를 목표로 우선 회원농가들이 사육하는 7천5백두의 한우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입력하고 매장에서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암소에 높은 수위의 개체관리를 실시해 홍천한우의 특성을 차별화 시킬 방침이다.